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No. 38

IIRI Online Series

유라시아 정세 전망과 한국의 전략

2017. 5



일민국제관계연구원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유라시아 정세 전망과 한국의 전략

2017. 5

*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에 맞춰 국제정세의 분야별 정부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제정치·외교·안보·통상분야 전문가 다수가 모여 논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서, 발언이나 주장의 출처는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음.

목 차

I. 중동 정세 전망과 한국의 전략	1
II. EU 정세 전망과 한국의 전략	4
III. 남아시아 정세 전망과 한국의 전략	8
IV. 중앙아시아 정세 전망과 한국의 전략	11
V.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14

I. 중동 정세 전망과 한국의 전략

1. 중동지역의 불안정성과 전략적 가치

- 최근 중동정세의 불안정성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는 우리나라 난민심사 실상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함. 매달 난민 300명 이상을 심사하고 있으며, 중동정세 불안이 먼 곳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접적 영향이 있는 심각한 상황임.
 - 4월 13일 미군이 시리아 IS 거점에 ‘모든 폭탄의 어머니(Mother of All Bombs)’라고도 불리는 MOAB(Massive Ordnance Air Blast) 폭탄을 투하하였고, 최근 시리아 군사기지 공습으로 중동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음.
 - 최근에는 IS가 약화되고 있지만, 테러의 네트워크화, 확장화(outreach) 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특히, 유럽에서는 IS가담 테러리스트가 본국이나 인접국에 돌아가서 테러를 감행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외로운 늑대(lone wolf)들이 연성 목표(soft target)를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차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유럽 국가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 한국은 중동지역 국가들과 전통적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중동은 최대 건설플랜트 시장이었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동을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음.
 - 언론에서는 중동의 정세가 ‘반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동, 특히 산유국 대부분이 상당히 ‘친미’성향을 갖고 있음. GCC(Gulf Cooperation Council) 6개 국가 중 사우디를 제외한 5개 나라(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에 모두 미군기지가 있음.
 - 사우디의 경우 국내정서상 미군이 철수했으나 미군 엔지니어(고문관)의 도움 없이는 전 투기를 펴낼 수 없을 만큼 미국에 안보의존을 하고 있으며, 타 서방국들도 중동 방산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군사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우리도 최근 적극적 진출 모색 중)
 - 세계 에너지 수송의 50%이상이 중동 지역을 둘러싼 요충지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음.
- 중동은 우리에게 외교안보의 동반자 또는 시험대가 될 것임.
 - 중동 국가들과 대 테러 대응, WMD 확산 저지, 인도적 지원 등 협력 가능한 분야가 많음. 하지만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 단절로 인해 우리 외교당국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사례나, 이란-북한 간 핵 협력 의혹 등은 외교의 시험대가 됨.
 - 미국의 북핵 대응에 있어 시리아 폭격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공습 후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이동함.

2. 아랍의 봄 이후 정세와 시리아 내전

- 최근 중동은 아랍의 봄 이후 시민혁명이 일부 내전으로 진행되며 민주화가 진전되지 않고 불안정성만 확대되는 상황임. 과거보다 복잡한 정치행위자들이 등장하며 아랍의 봄 이전보다 혼돈이 상시화, 장기화 될 조짐이 보임.
 - 20세기에는 군사독재정권과 세속주의 반정부세력 혹은 이슬람주의 반정부 세력의 대립구도가 대부분 중동 국내 갈등에 있어서는 주요한 행위자였음. 그러나 아랍의 봄 이후 IS같은 과격주의 이슬람 세력, 리비아나 예멘 등에서는 정치적 혼란을 심화시키는 부족세력 등이 등장함.
 - 또한 새로운 외부 행위자가 개입함. 러시아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중동에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다가 시리아 내전으로 중동에 군사개입을 시작하였고, 리비아나 이집트 등으로 군사행동을 강화하고 있음. 신냉전시대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중동을 둘러싼 정세가 복잡해짐.
- 아랍의 봄은 아래로부터의 시민혁명이 성공한 경우로, 한국의 4.19 혁명과 유사함. 한국처럼 빠른 경제 성장에도 대통령 직선제 도입에 27년이 걸렸듯, 중동에서도 앞으로 상당한 시행착오와 혼돈 속에서 민주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만성적 사회분쟁의 내재화임.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경제성장과 낮은 정치의식, 시민사회의 부재, 약한 시민사회 등이 확산되어있음.
 - 또한 국민국가 형성이 부재하여 체질적 불안정성이 존재함. 독재자가 사라진 후 국가가 분열되는 현상이 대표적임. 사담 후세인 제거 후 이라크는 3등분 되었으며, 카다피 축출 후 리비아에는 2개의 정부가 등장함.
- 시리아 내전의 장기화는 아랍의 민주화를 차단하였고, 동부지역 정치적 공백상태는 ISIS의 등장을 초래함. 이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여부와 방식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름.
 - 오바마 행정부는 화학무기 사용을 한계선(red line)으로 설정하였으나, 2013년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로 1,400명가량을 학살하였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는 중동 개입 최소화 의지, 다자주의 외교, 역내 균형정책과 더불어 ‘시리아의 늪’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함.
 - 트럼프 행정부는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 이후 공군기지에 폭격을 감행하여 상징적인 보복작전을 수행함. 그러나 적극적으로 시리아 문제에 개입 할 것인지는 불확실함. 스파이서(Sean Spicer) 백악관 대변인이나 헤일리(Nikki Haley) 미국 유엔대사가 언급한 것처럼 시리아 정권교체는 시리아인의 손에 있고 미국은 화학무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데에만 힘을 쓰며 트럼프 대통령도 주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현 사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임.

3. ISIS의 테러위협의 지속

- ISIS의 테러위협은 지속되고 시리아 국내 상황 및 이라크의 국내정치적 상황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임. ISIS라는 이름은 사라져도 이슬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반정부세력은 계속 남아있을 것임.
 - 미국의회조사국(CRS)에서도 ISIS를 규정할 때 ‘Sunni Terrorist Insurgent Group’이라고 지칭함. 즉 그들의 기본적 성격은 시아파 정부에 억압받은 권력과 이권에서 배제된 수니파 무장단체이므로 반란군의 성격이 가깝다고 봄. 이라크와 시리아의 정치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이상 ISIS의 위협은 지속될 것임.
 - 이라크 정부의 정치시스템은 연방정부(federal system) 형태임. 시아파가 주도하는 중앙정부, 북쪽에는 크루드 자치정부가 있음. 즉, 수니파는 배제됨. 수니파의 정치적 대변기구나 정부가 없다는데서 ISIS가 기인한 것이므로 수니파에게 정치적 대표권이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 반란군은 계속 등장 할 것으로 보임.

4. 이란과 사우디의 대결구도 장기화

- 예멘사태는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proxy war)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분쟁이 장기화 되고 한동안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사우디는 쫓겨난 합법정부인 수니파 정부를 지지하고 있으며, 시아파 반군이 예멘전역을 장악하고 국가를 세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이란의 복귀로 중동의 패권지위가 흔들리는 중 사우디의 뒷문이라 불리는 예멘까지 시아파 정부가 등장하게 될 경우, 사우디 정부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됨.
-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로 인해, 시아파 초승달(레바논-시리아-이라크-이란-바레인) 대(對) 수니파 초승달(터키-팔레스타인-요르단-사우디 등 걸프산유국) 사이의 대립이 첨예화함.
 - 성장 잠재력이 사우디를 압도하는 이란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며 상대적으로 사우디 시장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음. 이란은 자원, 인구, 수자원, 식량자급, 의식수준, 제국의 자부심, 제조업 기반 등 모든 부분에서 중동지역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국가임.
 - 사우디 내부적으로도 저유가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경제개혁을 시도하나 불만이 고조 되고 있음. 2015년 1월 살만 국왕이 왕실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으로 왕세자 교체, 자신의 아들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고 예멘사태 군사작전을 주도함. 사우디 내의 물리력을 장악하고, 집권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멘에 개입하고 있음.

5. 한국의 중동지역 대응전략

- 그간 한국의 중동정책의 특징은 지나친 경제편중, 종합전략의 부재, 인프라 취약으로 볼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 협력대상과 분야의 다변화와 유연화가 필요함. 지나친 주변 4강과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보다는 유연하고, 이해에 맞는 외교가 필요함. 중동과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 등 보다 한국적인 협력 사업이 필요함.
- 국가별 동반자 관계 확대가 필요함. 아랍 22개국 중 1개국(UAE)만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대 중동 전략적 관계의 구축에는 정상외교와 인맥이 중요함. 권위주의 국가체제에서는 정상외교가 필수적이며, 위급한 상황에는 인맥 활용 및 중동 특사 등을 운영해야 할 것임.
- 또한 중동과의 외교에서 (재난 발생 시) 구호기금 마련 등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이 있어야 함.

II. EU 정세 전망과 한국의 전략

1. 유럽 통합의 전망

- 보통 유럽정세는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이제는 중동 정세와 함께 논의되고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과거에 비해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임.
- 지난 3월 1일 유럽 27개국(영국 제외)이 2025년까지의 유럽의 모습에 대해 논의한 “5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유럽통합의 미래에 대해 전망해볼 수 있음. 금년 중 보고서가 발행될 예정임.
 - ① 현 상태 유지(Carrying on)
 - ② 대폭 축소(Nothing but the single market): 경제 단일시장만 유지
 - ③ 일부만 협상 강화(Those who want more do more): 동의하는 회원국 대상으로만 차별화된 정책 추진
 - ④ 효율적 운영(Doing less more efficiently): 선택과 집중 형식
 - ⑤ 전면 강화(Doing much more together): 유럽연합의 대폭 강화
- 현재 ①번과 ⑤번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크지 않고, ②번은 정치사회적 통합의 위축가능성이 있어 기피할 것. 결국 ③번과 ④번 시나리오의 결합 차원에서 진행 될 것으로 보임. ③

변은 동유럽 국가들이 뒤쳐질 것을 예상해 반발하고 있으나 향후 많은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됨.

2. 브렉시트(BREXIT)의 전개 및 관리

- 작년 6월 브렉시트가 가결되고 올해 3월 28일에 메이(Theresa May) 총리가 공식서안에 서명하면서 브렉시트의 본격화가 시작됨. 공식서안이 유럽연합에 전달되면서 회원국의 탈퇴권한을 명시한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함.
 - 리스본 조약은 200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회원국이 탈퇴할 경우 회원국 역내인구 65% 이상, 16개국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함. 또한 탈퇴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본 협정에 대한 동의가 필요함.
 - 3월 29일 이후 브렉시트 협상이 2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1) 2019년 3월 말 영국의 자동 탈퇴, 또는, 2) 만장일치로 협상연장 선택이 될 것. 시간을 끌수록 유럽연합이 유리하고 영국의 입장은 불리해짐. 그러나 시간을 오래 끌어서 양쪽 모두에게 좋을 것도 없음. 이러한 불확실성의 마무리에 상당한 기싸움이 예상됨.
-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의 7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건설적, 상호적인 태도를 갖겠지만 영국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음. 그러나 EU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챙기겠다는 식의) 영국의 체리피킹(cherry picking)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북아일랜드에 대한 강한 통제권에 대해 유럽연합은 불쾌한 입장임. 분리주의가 나오게 되면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뿐 아니라 스페인 카탈루냐 등에서도 도미노현상의 가능성이 있음.
 - 영국은 자유무역협상과 탈퇴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병행론을 주장하지만 유럽연합은 이에 반대하고 있음. 무역협상과 탈퇴협상을 따로 진행할 경우 영국은 자국의 불확실성이 커지므로 병행협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유럽연합이 즉각적으로 병행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5월 프랑스 선거, 9월 독일선거가 지나야 협상 진행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봄. 두 국가가 정치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브렉시트도 논의 될 것임.
-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이 위축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친유럽주의자들은 영국이 진심으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음. 이러한 시각에서는 영국의 탈퇴가 감정적, 정치적 큰 충격은 아니었을 수도 있음. 오히려 나머지 국가들을 엮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음.
 - 협상의 핵심은 위자료 문제인데 600억불 정도에 달함. 그 동안 영국의 분담금으로 뽑은 직원의 연금까지 생각해야 하며, 양쪽의 세법도 달라 결국 돈 문제가 많음. 영국도 일정 부분을 내야함.

3. 극우파와 대중주의

- 향후 5년 내의 유럽정세를 가늠할 지표는 프랑스와 독일의 선거, 극우파 문제임. 네덜란드 총선에서 빌더스(Geert Wilders)가 이끄는 반EU 성향의 자유당을 우려하였으나 자유민주당이 승리함. 특히 터키와의 외교관계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급한 불은 꺼 도미노 현상을 막았다고 볼 수 있음.
 - 독일은 기민당이 무난히 승리할 것이라는 연초의 예상과 달리 여론조사를 보면 사민당이 기민당을 쫓고 있는 상황임. 독일대안당이 상당히 의석을 갖고 실제로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음. 결국 극우논의가 부각되고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 대선은 중도신당(앙마르슈: En Marche!)의 마크롱(Emmanuel Macron)이 가장 유력한 후보이며, 결선 진출시 당선이 확실시됨.¹⁾
 - 마크롱이 당선 될 경우 6월 총선에서 제1당이 내각을 장악하게 되는데 중도(En Marche)가 과연 제1당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이원집정이 매우 약하고 불안한 체제이므로 프랑스가 정치적 영향력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국민전선이 의회 진출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제도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음.
- 유럽에서의 선거결과에 대한 예상은 대부분 동의함. 극우파가 집권하거나 참여할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나 다만 그들이 의회에 진출 시 극우담론이 공개적인 장으로 나오고 지지하는 세력을 모으기 위한 전반적 우경화가 우려됨.
 - 영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해서까지 유럽연합 탈퇴 결정을 내린 데에도 학력이 높지 않은 빈곤계층의 지지가 절대적이었음. 유럽 회의주의가 원인이 되어 극우파로 표현되는 유권자의 분노, 이주민이 내 고향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원인임.

4. 주요 도전과제: 난민, 실업, 테러

- 유로존 회원국들의 경제는 호전상태이지만 경기부양책을 거둬 상황은 아니며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음. 독일을 제외한 국가들은 청년실업률이 20%를 넘었고 동유럽도 비슷하여, 헬(hell)유럽이 되어가는 양상을 보임.
 - 통화정책은 유연성 확대의 문제가 있음. 그리스 추가금융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향후 경제위기 가능성을 없애지 못한 채 급한 불만 끌 것으로 보임.
- 난민문제가 가장 심각함.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오스트리아는 전체인구의 1%가 난민임. 유럽연합은 쿼터제를 통해 난민을 나누어 수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몇몇 국가는 반발, 특히

1) 2017년 5월 7일,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마크롱 후보가 66.06%의 득표율로 33.94%를 얻은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됨.

헝가리 등 주요 난민 유입 국가의 반발이 심함.

- 결국 공통적으로 쟁쟁 조약은 위축이 되고, 난민할당 문제는 상당한 갈등요인과 극우파 집결의 원인이 될 것임. 난민문제가 더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상당한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전망.

□ 테러리즘이 지리적으로 확대되고, 소프트 표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과거에 비해 서유럽에서 전통적일 북아일랜드 테러 등은 감소하였으나, 이슬람 급진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급격히 증가함.

- 유럽 내 극우파들은 반 이슬람 정서를 자극하고 있지만 유럽 내 이슬람 인구가 매우 많아 산발적인 테러위협까지 막을 수는 없음.

5. 유럽안보의 도전요소와 한국의 대응전략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이 나토 분담금을 GDP 2%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함. 나토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방위비분담과 인상문제가 제기되면서 영국을 제외한 유럽 연합의 안보역량은 위축될 것으로 보임.

- 영국은 금융과 안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유럽연합은 3월 6일 브뤼셀에서 해외군사활동사령부(MPCC: Military Planing and Conduct Capability) 창설 계획을 승인함.
- 테러와 사이버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공조를 강화하자는 입장임. 대 러시아 제재는 향후 5년 내에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해결방식은 미국의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한-EU 위기관리협정의 발효에 따른 EU 및 글로벌 안보 프로젝트에 있어서 참여 확대와 이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EU의 보다 긍정적인 기여를 모색함.

- 유럽연합과의 안보협력은 소프트 이슈(soft issue)와 위기관리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임. 위기관리역량과 인간안보는 분야에 있어 유럽과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테러의 글로벌화에 따라 대테러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이 필요. 나토와의 글로벌 파트너십 유지에 있어 일본의 동향을 살펴봐야함. 일본 자위대의 해외활동이 승인되면서 1차 범위 내에 유럽연합이나 나토가 있다면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한일 간 안보협력도 논의가 가능할 것임. 난민, 이민문제 등은 앞으로 5년간 유럽에 관한 한국의 정책 주요사안 될 것으로 봄.

III. 남아시아 정세 전망과 한국의 전략

1. 인도-파키스탄 긴장관계 지속

- 인도의 모디 정부가 2004년에 출범 이후 추진되던 대 파키스탄 우호정책은 2016년 인도 우리(Uri) 군사지역 테러 발생 이후 강경책으로 전환됨. 인도는 즉각 보복조치로 국지타격(surgical strike)을 통해 파키스탄군 38명을 사살함. 국지전에 가까운 분쟁이 일어났으며, 모디 총리는 핵 선제타격까지 언급하며 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진행.
- 카슈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양국 간의 대립관계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음.
 - ① 파키스탄 국내정치의 불안요인: 전통적으로 파키스탄은 내부의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인도와의 카슈미르 분쟁을 이용하는 패턴이 있어왔음. 2018년에 파키스탄 총선에 카슈미르 문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② 인도 힌두 근본주의 세력의 득세: 현 모디 정권 자체가 힌두 근본주의 세력이며 최근 지속적으로 힌두 근본주의 세력이 확대되고 있음. 인도의 정치1번지 우따르 프라데시 주정부에서 힌두 근본주의세력이 집권함.
 - 향후 수년간 카슈미르를 중심으로 한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서 테러가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미 ISIS 세력들도 인도와 파키스탄에 들어와서 테러를 수행하는 모습이 보임.

2. 남아시아 역내 협력 담보상태 지속

- 인도-파키스탄 관계의 악화로 인해 역내 협력기체인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도 담보상태이며 오히려 퇴보하는 현상이 나타남.
 - 우리(Uri)지역 테러 이후 인도가 19차 SAARC 정상회담을 보이콧 하였음. 주변국들도 인도에 동조하며 보이콧을 행사함. 결국 파키스탄이 스스로 SAARC 정상회담을 철회하고 의장국인 네팔이 정상회담을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함.
-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의 패권국인 인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임. 중국과 파키스탄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SAARC에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SAARC

의 역학이 복잡해진 형국임.

- 현재 옵서버 국가인 중국이 나서며 SAARC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공식적인 SAARC 회원국이 되겠다고 요구중임. 파키스탄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상황임(현재 한국, 중국, 미국, 호주, EU, 이란, 일본, 모리셔스, 미얀마 9개국이 옵서버로 참여 중)
-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에 중국이 엄청난 투자와 물량공세를 하면서 전통적인 인도의 우방국을 중국의 우방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음.

3. 인도의 역내 패권국 지위 공고화 노력

- 인도는 남아시아 역내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남아시아 지역우선정책”을 도입함. 이는 해당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임과 동시에, 중국의 일대일로, 대양 실크로드, 진주목걸이 전략에 대항하는 인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
 - 인도가 통 큰 양보를 통해 방글라데시와의 영토, 해양 분쟁을 해결하였음. 그간 분쟁으로 인해 먼 거리를 항해했던 비경제적 무역관행을 폐기하고 방글라데시와의 무역 협력을 빠르게 진행 중임.
- 모디 정부의 등장 이후 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과거 경제적 목적으로 소위 중국과 양다리를 걸치던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이 인도 모디 정부 집권 이후 친 인도 성향으로 돌아서는 양상임.
 - 인도가 주변국과의 국경문제에서 상당히 양보를 많이 하고 있음. 특히 이는 방글라데시에 접근하는 중국의 자본을 간접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남아시아 역내 문제에 있어서는 부탄이나 스리랑카, 네팔과 같은 경우 무역 의존도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인도인 디아스포라들이 건너가서 현지사회에서 정치나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 지역을 넘본다고 해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인도는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전략에 맞서 남아시아 지역우선정책과 더불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모ซัม(Mausam)”과 “적극적 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추진 중임.
 - ‘모ซัม’은 우기/편서풍의 의미로 편서풍을 타고 동남아를 거쳐 일본까지 인도의 문화를 전파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는 의미임. 소프트파워, 문화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와 일본까지 우호관계를 더 강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추진 중.
 - 전략적 요충지이나 미개발 지역이었던 안다만 제도와 니코바르 제도에 인도가 15억불을 투자하여 중국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통해 벵골만에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음. 최근에는 중국의 핵잠수함이 빈번하게 출몰하여 인도가 잠수함을 감시하는 조치를 취하는 중임.

- 인도는 국방·외교분야에 초점을 두고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지역연안에서 인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말라카해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호주, 일본, 더 나아가 미국과도 외교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적극적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벵골만 지역 협력체인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회원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인도, 스리랑카, 네팔, 부탄).
 -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놓인 SAARC 대신, 파키스탄이 빠지고 ASEAN 지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BIMSTEC에 인도가 적극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려 노력중임.
 - 1997년에 탄생한 BIMSTEC은 그간 별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에 중국이 파키스탄을 끌어들이며 인도를 흔들면서 인도에서는 본격적으로 파키스탄을 제외한 BIMSTEC에 투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4. 한국의 남아시아 대응전략

- 현재 남아시아는 “파키스탄-중국-러시아”의 삼국 협력구도가 서서히 구축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인도-미국” 관계가 강화되며 대립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형국임(마치 70년 만에 인도-구소련이 파키스탄-중국-미국과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던 현상과 유사함).
 -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추구해 왔으나, 최근에 인도-미국 관계가 워낙 진전되고 인도가 공개적으로 민주주의 서클에 편승하면서 러시아와 소원해지는 중임. 전통적으로 인도는 전투기를 비롯해서 절대다수 무기를 러시아에 의존해왔으나, 이제 인도가 미국이나 프랑스 등으로 무기 구매 및 원자력 협력을 다변화시킴.
- 남아시아의 대립구도가 가시화되며 한국의 대 남아시아 대응전략은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음. 특히, 파키스탄과의 관계증진에 있어 인도를 의식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개별·양자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SAARC와 협력을 하는 동시에 인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BIMSTEC에도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에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르는 스리랑카 및 방글라데시와도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파키스탄이 약 2억에 가까운 시장이고 포기할 수 없지만,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략적으로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인도에 초점을 맞추는 BIMSTEC에 공을 들일 필요가 있음.

IV. 중앙아시아 정세 전망과 한국의 전략

- 신정부 출범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며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의미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고, 중앙아시아 경제상황이 최근에 좋지 않아서 한국에게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는 시점임.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에 어떤 전략적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지 분석과 고민이 필요함.
- 작년 5월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이 중국 ‘일대일로’와 러시아 ‘유라시아 파트너십’의 공동 시장에 합의했음. 유라시아에 일종의 반미적 경제 질서가 싹트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푸틴이 추진하는 유라시아 파트너십은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입한 인도, 파키스탄과 옵서버 국가인 이란, 동남아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통합이 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잠재적 갈등요인을 내포함.
 - 한국의 대 유라시아 협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임. 중앙아시아는 중국,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쟁적 레버리지를 갖고 있으므로, 한국의 대 유라시아 협력에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음.

1. 중앙아시아 각 국의 최근 정세

-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체제가 상당히 공고화 되어있지만 고령으로 인해 최근에 권력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시도함. 대통령 교서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와 총리에게 상당부분 이양하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였음.
 - 경제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산유국으로서 어려운 상태이며, 특히 제일 큰 유전인 카사간 유전이 상당기간 생산 금지 상태에 있었고 재가동 되었으나 중국과 같은 수요처와 합의 부진으로 빠른 경제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 한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많음. 한국이 추진하던 많은 프로젝트가 취소상태에 있으며, 특히 삼성이 추진했던 발하쉬 전력사업이 좌초됐기 때문에 대 카자흐스탄 경제협력 관계가 현 우리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임.
-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으로의 권력 승계가 기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짐. 미르지요예프는 카리모프의 유산을 승계하면서도 인권문제 등에 전향적인 차별화 행보를 보임. 미르지요예프는 친 러시아 인사로 알려져 있었으나 카리모프의 중립적 외교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경제는 성장 신화가 깨지고 있음. 자원가격 하락, 러시아 경제에서 송금이 전체 GDP의

1/4정도였는데 그것이 상당히 축소됐기 때문임.

- 대외적으로 역내 국가들과 관계개선에 노력함. 특히 타지키스탄이 우즈베크 수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군담 공사를 시작했는데 우즈베크은 오히려 중지되었던 직항편도 복원하였음.
- 한국과는 카리모프 시기의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아지모프 부총리가 방한하여 경제공동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어갔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들도 정상궤도에 올라갔음. 그러나 양국의 교역량은 감소 추세에 있음.

□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민주주의의 섬으로 불리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기대되는 국가임. 곧 임기가 끝나는 아탐바예프 대통령이 내각제 중심의 총리에게 권한이 이양되는 헌법 개정을 주도하여 야당과의 문제가 발생함. 최근 국제기구의 인권규정이 국내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인권분야의 후퇴조짐이 보이고 있음.

- 전체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쿰토르 광산 문제가 정치화됨. 광산을 보유한 센테라사는 미국의 광산회사를 매수하며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으나 좌파 성향의 야당은 국유화를 요구 중임. 센테라사와 관계가 소원한 아탐바예프 대통령 하에서 이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관계 개선 노력중임. ‘2014 인권옹호상’과 관련하여 미국과 마찰이 있었지만 최근에 아스카로프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이 전향적으로 키르기스스탄과 관계를 고려중임. 한편 중국과의 관계개선에도 속도를 높임. 리커창 총리가 우즈베크-키르기스스탄 연결철도를 제안하는 등 키르기스스탄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시도중임.

□ 투르크메니스탄: 작년에 헌법을 개정하며 영구 집권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가스 수출국이지만 저유가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임.

- 대외적으로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가스관 건설과 TAT(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 철도 연결 사업이 투르크메니스탄 주도로 진행되고 있음.
- 철도 건설은 이들 국가의 경제협력은 물론 아제르바이잔, 중국,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유럽의 국가로 상품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철도 회랑임. 한국에도 상당히 중요한 물류 연결망이 될 수 있음.

□ 타지키스탄: 작년 5월 라흐몬 대통령이 가족 세습이 가능하도록 수정헌법을 전력 통과 시킴. 대통령 입후보자 연령제한을 35세에서 30세로 낮춤. 아들에게 권력이 세습될 것으로 보임.

2. 국가차원의 대 중양아 협력에서의 고려사항

- 한-중양아 협력포럼이 10주년을 맞이하며 사무국이 설치되었으나 여러 합의가 부진하고 소규모로 축소됨. 우리 정부가 한-중양아 협력포럼 사무국을 확대할 수 있는지, 그 수준을 장관급 상호개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경제 의제뿐만 아니라 정치의제까지도 의논할 수 있는 중양아시아 협력포럼으로 갈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중양아시아도 지방정부 간 협력이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수준으로 미비한 지역임. 따라서 중소기업 진출과 농업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간 협력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물류 분야 협력을 위해 물류기지 설치를 우선시해야 함. 호르고스 국경 철도역이 2012년에 개통되어 TSR 제2루트가 활성화되어 중국 물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음. 한국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전용공단을 설치하여 물류기지(freight base)를 확립한다면 극동에서의 물류 경제성도 빠르게 확보되어 유라시아 물류 통합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중양아시아 대부분이 체제전환에 있는 국가이고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권위주의 체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데, 향후 남북협력과 체제전환을 고려 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의 공간이 될 수도 있음. 개발협력에 대한 컨셉을 확대적으로 해석하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개발협력전략은 지역별로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고 단발성으로 진행하다보니 중구난방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중양아시아를 거시적 차원에서 개발 협력을 시도하는 지역으로 접근 해 볼 필요가 있음.
 - 개발도상국의 제도적인 취약점 때문에 우리가 노하우를 가진 ‘Aid For Trade’방향으로 투자와 원조를 병행하며 성장을 유도하며 통상까지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아야 함.
 - 한국이 우즈베크에서 성공한 이유는 ODA 자체가 우즈베크가 필요한 것에 집중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임. 우즈베크와의 개발협력, 산업협력 성공사례를 고려하며 향후 대 중양아시아 원조 및 투자의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중양아시아는 독재정권이 강화되면 한국과 정치적인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음.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 보다 집중해서 중양아시아와의 관계 속에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도 테러방지 등의 분야에서 중양아시아 국가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들이 존재함. 중양아시아 이민족들이 국제 테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 내에도 1,000명이 넘는 우즈베크 출신 유학생과 중양아시아로부터의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잠재적 위협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테러리스트 양산의 근본적 이유가 경제적 취약성에 있으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립을 위해 개발협력, ODA를 통해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함. 한국의 독자적 활동으로는 어렵고,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통해 국경 통제라든지 지역개발에 ODA를 적극 활용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중앙아시아가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며 최근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포지셔닝을 정교하게 하고 물류협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국가별로 액수는 다르지만 1:1로 들어온 돈이 약 2억불 정도임. 하지만 외부에서 보이는 것 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집단안보체제가 없이는 안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은 장점이 있는 IT와 물류 분야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V.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1. 대 중동 균형외교와 새로운 시장 창출

- 중동 역내 역학구도에서 사우디가 지고 이란이 뜨고 있는 세력전이 상황임. 한국의 대 중동외교는 균형을 잘 잡을 필요가 있음. 이란이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는 하나, 너무 이란에 빨리 접근하여 사우디나 미국에 미움을 사는 일은 피해야 하며, 그렇다고 너무 늦게 다가가서 이란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상황임.
- 중동은 국가와 사회 간의 성향차이가 큼. 이란정부는 반미성향이지만, 국민들은 친미성향이 강함. 사우디도 정부는 친미이지만 국민들은 반미정서를 갖고 있음. 이처럼 정부와 사회의 입장이 다를 경우 공공외교가 중요함.
- 향후 5년간 중동의 가치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함. 산유국 GDP가 최근 20-30%감소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임. 이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는 있음. 비전 2030 같은 새로운 산업 만들고, 금융, 의류 등 산유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도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함.

2. 유럽 및 영국과의 새로운 무역관계 구축

- 브렉시트 이후 한국의 대 유럽 무역외교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영국과는 자유무역 협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유럽연합과는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
 - 유럽연합과의 협정은 영국의 탈퇴시점이 한-EU FTA 체결 이후 10년 정도 지난 시점이 될 것이므로 확실한 탈퇴 후 한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영국은 한-EU FTA에 준하는 협정을 원하고 있으나, 막상 협상이 시작되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면밀한 준비를 해야 함. 한국 외교부에서는 브렉시트 직후 영국과의 FTA협상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우리는 밀고 당기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봄. 영국은 경쟁력이 강한 서비스 부분을 협상하려 할 것이지만 우리는 취약한 부분이므로 유의해야 함.
-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상에서 한국이 먼저 협상의지를 밝힌 것을 영국은 반가워하고 있으나, 우리 입장에서 서두를 필요는 없음.
 - 현재 영국의 가장 큰 문제는 협상인력 대부분이 브뤼셀에 투입되어 2년 후에나 복귀한다는 점임. 병행협상을 하자는 영국에 유럽연합은 협상할 사람이나 있냐고 할 만큼 제한적임.
 - 한-EU FTA는 현재까지 우리가 조금 손실이 있음. 유럽경제의 침체로 유럽의 구매력이 감소한 원인이 있음. 일시적 무역적자 부분은 영국이 원유수급에 있어 북해산 원유를 2년 정도 많이 산 것이 반영된 것임.

3. 인도와의 중견국 외교 활성화

- 인도와는 중견국 외교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국제정치적 역학을 통해 보아도 한국과 인도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 서로 대화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음.
 - 인도-파키스탄-중국관계가 우리나라-북한-중국과 구조적으로 유사함. 인도와 같이 우리도 경제적으로 중국과 의존도 높지만, 그러면서도 중국은 파키스탄과 북한을 완충지대(buffer zone)로 가지고 있는 구도임.
 -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제2의 중국'은 인도라고 볼 수 있음. GDP 규모가 거의 2조2천억 정도고 불과 1년 전만 보더라도 1조 정도였는데 앞으로 4-5년만 지나면 인도 하나가 아시아 전체 시장 사이즈를 돌파하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인도가 중요함.

- 남아시아 역내 갈등으로 인도로 진출 시 우리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으나, 최근에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국의 외교정책이 다변화하는 시발점이 되어 인도와의 관계개선이 본격화 될 수 있다고 보여짐.
- 중국과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한 한국의 경제, 외교부분에 있어서 관계의 다변화를 꾀할 때 인도가 하나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음. 인도가 차이나 리스트를 줄이는 거의 최후의 대안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함.
- 인도는 6.25전쟁 때 비동맹 중립국으로서 철저히 우리 편을 들었으며 진정한 남북의 독립은 남한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함. 인도가 원하는 민주주의 서클(미국-일본-한국-호주-인도)의 탄탄한 외교안보협력체 구성을 위해 한일관계의 진전을 바라고 있음.

4. 정교한 정책설계를 통한 남아시아 협력

- 남아시아는 역외 행위자들의 권력구조가 복잡하게 얽여 있음. 인도-베트남-미국-일본과 함께 BIMSTEC으로 연결되는 방글라데시-스리랑카-부탄-네팔, 그리고 이에 맞서는 파키스탄-중국-러시아 두개의 네트워크가 경쟁하고 있는 양상임.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도에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들어가기 보다는 반 스텝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정교한 정책설계를 통해 접근해야 함.
- 우리가 인도와 협력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오히려 중국의 핵심이익과 충돌할 경우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인도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중국 문제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할 것임.

5. 대 중동, 대 중앙아 정상외교 강화

- 중동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권위주의적인 특징과, 대통령(지도자)의 독점 구조가 강력하므로, 프로젝트 추진과 협력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을 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아직도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 상당히 많으며 민영화를 차차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구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장기발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장기발전 프로그램에 충분히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살펴봐야함.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부분은 IT, 화학, 농업, 건물자재 등이 공통적인 항목임.

6. 중앙아시아에 대한 유라시아 차원의 거시적 접근

- 그간 통상전략의 문제는 한 지역만을 고려한다는 점임. 중앙아시아는 5개국 전체 인구가 6천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장이므로 개별 물류기지가 들어가는 것은 어려움. 하지만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중동을 잇는 연결성(connectivity)은 매우 시장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네트워크라는 큰 전략 속에서 각 지역별 전략을 세워야 함. 연결성을 분석해보면 중앙아시아에서 우리의 강점은 플랜트 건설 분야이며 그 대부분이 이란, 파키스탄, 인도까지 나가는 남부회랑(Southern Corridor)으로 향하는 것임.
 - 러시아에 대한 수출기지, FTA 가공단지로서 경제성에 대해 본다면, 물류기지의 가능성을 더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유라시아라는 거시적 시각 속에서 중앙아시아 진출 계획을 세워야 함. 한국은 중국 동쪽, 즉 동아시아를 바라볼 때는 여러 테마 별로(예: 물류, 방산, 에너지 등) 분류하는 경향이 있으나, 중국 서쪽, 즉 유라시아를 분석할 때는 소지역(중동, 중앙아, 남아시아 등)으로 나누어 (테마별로 보지 않고) 지나치게 지역별로 단순화 하는 경향이 있음.
 - 중앙아시아도 우리가 그리는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의 큰 그림, 즉, 거점형 연결성에서 어떤 위치인지, 새로운 신시장이나 통상 전략에서 어떤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속하는지 치밀한 계산을 통해 접근해야 함.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고 도와줄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전략적 초점임.

/끝/